

8기 통일아카데미 2강

꼬여있는 남북관계  
해법과  
최근 주요 이슈  
독해법(讀解法)

고경빈

## 꼬여있는 남북관계 해법과 최근 주요 이슈 독해법(讀解法)

고경빈

(前 통일부 정책홍보본부장, 서울사이버대학 대우교수)

### 목 차

1. 남북관계, 어디서부터 어떻게 꼬이게 되었나?
2. 남북관계 해법은 있는가? 운명에 맡길까?
3. 남북관계 돌파구 어떻게 마련할까?
4. 최근 남북관계 이슈 독해법(讀解法)

#### 1. 남북관계, 어디서부터 어떻게 꼬이게 되었나?

남북관계가 꼬인 것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경색국면이 조금 부각되었을 뿐, 분단과 전쟁 그리고 일제의 국권침탈까지 올라가야 제대로 계산이 된다. 식민 지배를 우리가 주체성을 가지고 극복하지 못하고 강대국 손에 어설프게 처리된 것이 끝내 화근이었다. 국제정세에 밝은 지도층이 자신의 국내 정치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이에 편승한 후과다. 국제정세가 미 소간의 진영대결로 재편될 때, 각기의 후견 진영에 기대어 줄을 서는 바람에 분단이 공식화되고, 공산당 내부 권력다툼이 남북간 내전을 유발하고 그것이 국제전으로 비화하고는 끝내 승부를 내지 못

하는 바람에 분단이 고착되었다<sup>1)</sup>. 특히 6.25 전쟁으로 인한 민족내부의 적대감, 증오심, 복수심과 동족상잔의 무서운 기억이 재현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작용하여 남북관계를 한없이 꼬이게 만들고 있다. 이것이 근본적 배경이고 현실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외면할 수 없는 여건이다<sup>2)</sup>.

남북관계는 현실적으로 대립과 갈등관계이며 상호배타적이다. 법적으로는 전쟁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다. 궁극적으로 화해협력의 방향으로 남북관계가 발전되어야 하지만 이것은 장기적 방향성의 문제이지 5년 임기를 가진 행정부가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되기 어렵다. 남북관계에 있어 갈등의 존재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가 아니다. 갈등을 원만하게 처리하는 메커니즘이 존재하느냐의 여부가 더 중요하다<sup>3)</sup>.

---

1) 분단이 공식화하고 고착되는 과정에 공산당 책임이 크다. 미소의 점령 정책 차이도 빌미를 주었다. 미군은 직접지배 방식으로 군정청을 설립하고 여운형의 인민공화국이나 김구의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정치지도자들이 개인적 차원에서 미군정청을 상대해야 했다. 그러나 소련군은 간접지배 방식으로 당시 건국준비위원회를 이용하여 공산당 중심의 인민위원회로 재편하는 것을 도우면서 이를 사실상 행정기구로 활용하였다. 이로써 대한민국 정부 수립 2년전부터 북한에는 사실상 정부가 존재해 있었다. 6.25 발발의 계기도 남로당 박헌영의 월북으로 인해 공산당내 입지에 위기를 느낀 김일성이 통일문제 이슈의 선점을 위해 전쟁을 구상했다는 견해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2) 전쟁의 결과로 전쟁지도자들의 정치적 입지가 강화되는 사례가 많다. 김일성은 박헌영을 미국의 간첩으로 몰아 처형하고 김두봉 등 타 당파 인물을 숙청할 수 있었다. 반면 남한에서는 작전지휘권을 맥아더에게 이양한 이승만 대신에 전쟁 통에 힘을 키운 군부와 엘리트 장교들이 후일 권력을 잡는 기반이 마련된다

3) 유럽통합의 경험에서 보면 갈등의 존재가 통합(Integration)의 장애요인 이기보다는 오히려 갈등처리 기재의 필요를 제기하고 이 기재를 중심으로 통합노력이 강화된다는 관찰이 있다. 이러한 입장은 신기능주의 이론으로 뒷받침되는데, 상대적으로 갈등요인이 없는 공감대의 기능적

남북간 근본갈등의 원인은 서로의 존재 자체이며, 특히 국내외 정세격변기의 생존위기와 관련 있다. 상호공존에 합의하고 신뢰할 수 있다면 여타 갈등은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다루어 갈 수 있다. 그러나 남북은 7.4성명, 기본합의서, 6.15선언 등에서 공존합의를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긴장이 재발되는 일을 되풀이 하고 있다. 공존합의에 대한 불신은 현실이다<sup>4)</sup>. 각자 생존에 가장 큰 위협은 상대방의 존재 자체가 되는 상황에서 되풀이 되어온 일이다.

현재 북한은 개혁과 개방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개방하는 순간 바로 붕괴사태를 맞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대개의 관찰이다. 개혁의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 대신 남한이라는 성공한 대안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이다. 만약 북한이 동남아시아 어디에 남한과 떨어져 존재한다면 벌써 개혁개방에 나섰을 수도 있다<sup>5)</sup>. 북한이 핵을 개발하려는 것은 미국보다 한국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 미국과 협상을 통해 한국이 북한을 공격하거나 흡수하지 않도록 보장해 달라는 것이 그 본질일 것이다.

## 2. 남북관계, 해법은 있나? 운명에 맡길까?

절박한 북한의 생존위기는 국제냉전구조가 해체된 후에 형성된 것이고, 전에는 오히려 남한의 생존위기가 상대적으로 절박했던 시

통합을 우선해야 한다는 기능주의 이론과 대비된다.

- 4) 그간 남북합의가 서로 공존하자고 하면서 통일을 지향하자고 하는 즉, 공존합의(현상유지)와 함께 통일에의 당위성(현상변경의 불가피성)에도 함께 합의함으로써 논리적 모순에 빠진다는 측면도 있다.
- 5) 또한 남한도 국가보안법이 불필요했을 것이고 선진국들처럼 공산당을 자신 있게 합법화 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기가 있었다. 당시의 상황과 남한의 대응을 살펴보는 것은 현재 북한이 체감하는 위기를 역지사지로 이해하도록 해 준다.

6.25이후 상당기간 북한은 우리에게 공포였다. 압도적 군사력과 경제력 등 총체적 국력에서 열세였던 남한은 수세적인 입장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하였고 그 중심은 안보였다. 더구나 군사정권의 취약한 민주적 정통성은 북한에게 대남심리전의 토양을 제공했다. 인도지나반도 국가들의 연이은 공산화를 본떠 비정규전에 의한 남한정부 전복을 시도할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남한은 한미동맹을 강화하여 위협에 대처할 수밖에 없었는데 한때 닉슨독트린 이후 주한미군의 감축이 추진되었을 때는 자주국방 일환으로 핵개발을 추진했었다. 이런 위기에서 “7.4성명”이 발표되지만 남한은 이를 현상유지에 활용하려는 반면, 북한은 이를 이용하여 상황변화를 기도하려는 동상이몽 속에서 합의 이행에는 실패하고 만다.

20년 후인 90년대 초 남북은 상대적 여건이 역전되어 다시 만나 “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에 합의한다. 동구 공산국가의 붕괴 등 탈냉전 기류 속에서 현상유지를 원한 북한과 상황변화를 추구한 남한의 동상이몽으로 이번 합의도 이행되지 못 한다. 결국 한쪽이 위기를 겪고 있을 때 상대에 의한 상황변화 추구는 바로 공존합의를 불신하게 한 것이다. 당시에는 서로 신뢰할 수 없으면 대화 없이 관계를 끊고 지내도 그만이었다. 서로 단절된 채 냉전적 관계로라도 공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경제난을 오래 겪으면서 북한의 상황유지를 위한 지구력이 소진되어 가기 때문에 우리의 적극적 상황변화 노력이 없더라도 상황변화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6)</sup>. 특

---

6) 한동안 북한체제의 지구력과 관련하여 조만간 붕괴할 것이라는 관점과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관점을 가진 전문가와 관료 사이에 대안을

히 이럴 때 우리가 상황에 개입할 끈이 없다면 북한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다. 한반도의 준비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은 상황변화가 가져올 대혼란과 이에 수반될 폭력적 상황은 우리에게서는 전쟁을 제외하고 가장 큰 악몽이 될 것이다<sup>7)</sup>. 과거처럼 등을 돌리고 냉전적으로 지내더라도 공존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 어렵다.

더구나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선언했고 실제로 두 차례나 핵실험을 했다. 우리에게 최악의 시나리오인 북핵문제가 미해결인 상황에서 북한에 개입할 끈이 없는 채 한반도에 근본적 상황변화를 맞는 일이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의 붕괴에 대비하되 가급적 남한에의 부정적 영향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가능한대로 북한의 연착륙을 돕고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할 것이다. 북한문제에 선의건 악의건 방관하거나 붕괴를 유도하는 것은 우리의 희생과 부담을 너무 크게 할 우려가 있다. 이것은 북한을 보는 관점의 다양함과 다른 차원에서 현실정책의 준비성 (Readiness or Preparedness)문제이다.

남북의 국력이 역전되고 국제정세와 주변상황이 우리에게 크게 유리해 진 것은 분명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매우 편안한 입

---

달리하면서 논쟁을 한 적이 있었다. 둘 다 근거가 있으며 현 시점에서 맞고 틀리다고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질 문제이다. 다만 정책을 수립하는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면서 최선의 상황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우리에게서는 통일 후에 북한이 어떻게 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통일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 7) 북한의 체제는 그 지구력이 소진되어 가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 그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핵, 미사일 등 모든 생존카드를 다 쏟아 놓으면서 도박하는 기분으로 상황을 전개해 가고 있는 바, 경제난에 후계문제까지 안고 있어 6.25이래 최대의 불안정한 상황에 처한 것 같다.

장에서 여유를 가지고 북한문제를 다룰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북한이 너무 취약해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강해서 위협(Threat)이 된다고보다 너무 취약해서 위험(Danger)한 상황이다<sup>8)</sup>. 똑같은 위기의식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관점도 있지만, 북한체제 지구력은 시간이 가면서 소진되고 있는 만큼 그날을 대비해야 하는 우리에게도 시간은 소진되고 있다<sup>9)</sup>.

### 3. 남북관계의 돌파구 어떻게 마련할까?

우리의 노력이 집중돼야 할 당면 과제로 핵문제 해결, 남북관계 발전, 국민적 공감대 확충의 세 가지를 들 수 있겠다.

첫째, 한반도의 구조적 변화가 닥치기 전에 북핵문제를 풀어야 한다. 핵문제는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다.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핵문제는 북한체제가 존재하는 기반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북한이 붕괴하지 않는 한 해결할 수 없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두 주장 다 근거가 있다. 두고 볼일이다. 핵문제가 가지고 있는 어두운 문제점들에 더하여 우리 입장에서 하나 더 문제점을 추가한다

---

8) 만약 북한이 붕괴될 때 남한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아마 남한도 한국전쟁 이래 최대의 위기상황에 놓일 것이다. IMF 사태의 몇 배에 해당하는 충격을 우리 경제에 줄 것이고 북한 난민 통제에 사회경제가 큰 혼란에 빠질 것이며 외교적으로 중국, 미국 및 일본 등과도 동북아 질서 재편 문제로 상당한 갈등을 빚기도 할 것이다.

9) 남북관계의 큰 흐름은 정해져 있는 것 같다. 우리는 더 이상 북한과 경쟁하거나 씨름하는 단계에 매달려 있을 수는 없다. 한반도의 미래를 책임 있게 준비해 나간다는 자세로 북한문제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 "미래가 불확실한 북한과 무엇을 같이 한단 말인가?"가 아니라 북한의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통일을 준비하는 것은 북한을 어찌해보겠다 하기 이전에 우리의 미래에 대비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면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를 강화한 일이다. 북핵문제와 연결되어버린 한반도 평화체제의 문제 나아가서는 장차 통일논의조차 앞으로 열강의 개입 구실을 마련해 줄 우려가 있는 것이다.

둘째는 남북교류협력 접촉면을 가능한 넓고 깊게 유지해 유사시 우리가 개입하여 통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당국은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최선의 상황을 조성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에게 최악의 상황은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이 붕괴되는 또는 한반도에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조성되는 것이다. 어쩔 것인가? 반대로 핵문제가 조기 해결된다더라도 주변국은 그것으로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분단 극복의 문제가 남아있게 된다. 우리에게 핵문제 해결과 통일의 준비, 즉 북한문제에 적극 개입하는 일에는 순서가 없다.

셋째는 대북정책에 있어 초당적인 일관성을 유지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튼튼히 하는 것이다. 남북 당국의 의지가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합의사항이 국내정치적으로 지지를 받지 못하면 오히려 아무런 합의가 없었던 것이 나왔을 수 있다. 그리고 대북정책이 궁극적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노력과 연결되어야 할 사안이라면 대북정책의 절반은 국민적 합의를 확보하는 노력에 쏟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 대북문제는 이념 성향의 구분지표라도 되는 것처럼 진보와 보수의 잣대로 갈라서 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국민적 공감대의 의미를 국민 각자의 사상과 관점과 생각의 자유라는 차원에 본다면 진보의 관점이든 보수의 관점이든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생각과 사상의 자유에 속한 문제로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다. 특히 남북문제의 2중성에 비추어 서로 상충되는 주장들도 각자 다 근거가 있게 마련이다. 북한을 적대시하는 주장도, 협력하자는 주장도 근거가 있다. 또한 통일문제에 민족적 관



점을 강조하거나 국제적 측면을 강조하는 의견도 다 일리가 있다. 더 나아가 엄밀한 의미에서 이런 문제에 국민들이 생각이 다 같을 이유도 필요도 없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의 관점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 국민적 합의에 포함되면 된다고 본다. 최악의 상황이 올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 여하에도 불구하고 상정 가능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다.<sup>10)</sup> 통일문제는 중요한 안보문제이다. 북한정권에 대한 관점과 전망이 국민 각각 다르겠지만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서 최선을 상황을 유도하려고 노력해야 한다.<sup>11)</sup> 북한이 아무리 믿고 못 미더워도, 정부와 국민의 역량이 충분해 보이지 않아도, 정부가 민족적 관점을 가지고 남북관계에 적극 개입해야 하는 것은 진보나 보수의 입장과는 별개로 정부가 취할 기본적인 임무라고 생각한다.

대북정책이 대북 개입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1988년 7.7선언을 기점으로 볼 수 있다. 노태우 정부는 소위 "만형정책" 입장에서 북한이 호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를 일방적으로 취하기 시작했다. 남북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돕는 일이었다. "접촉을 통한 변화"의 정책이 시작되었다. 김대중정부가 "햇볕정책"으로 이를 계승하고 현정부의 정책도 같은 방향에 서 있다고 본다.

---

10) 전쟁을 원하는 국민은 없어도(국민적 합의) 정부는 전쟁에 대비한다. 특정국과 관계설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기다리지 않고 정부는 최악 상황을 상정해서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

11) 최악의 상황이란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하는 폭력을 수반하며 남한의 경제사회에 통제할 수 없는 수준의 엄청난고 갑작스러운 충격을 주는 사태를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의 남북관계는 답답하게 꼬여 있어 보인다. 그러나 큰 그림으로 보면 상황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기본구도에서 같다고 본다. 북한의 취약성이 심화되고 남북관계의 불안정성이 고조되는 추세 그대로다. 남북간 긴장과 갈등이 부각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새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갈등을 풀어나가는 남북간 메커니즘의 약화에 있다. 그것은 단순한 당국간 남북대화의 중단만이 아니라, 실물 분야의 남북관계, 즉 남북간의 인적 물적 교류, 다시 말하면 남북한 접촉면의 축소에 기인하고 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향후 한반도 상황에 우리가 일정한 통제력을 가지려면 남북간 다양한 관계망들이 들어서 있어야 한다. 많은 접촉면을 유지하면서 북한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끈을 확보해야 한다.

이것은 첫째, 장차 한반도 상황 화시 국제무대에서 한반도에서의 남한의 특수 지위를 확보한다는 의미<sup>12)</sup>와 둘째, 이를 통해 남북간 소통하면서 갈등을 순화시키거나 우리의 의지로 상황을 가능한 범위에서 통제하는 주요 수단이 된다는 의미가 있다. 남북 당국간 관계가 좋지 않을 경우에도 민간차원에서의 접촉면을 열어두는 것이 의미가 있으며 당국관계가 경색될수록 민간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셋째, 접촉면 확대를 통해 남북간 주민간 적대감을 완화시키는 노력을 지속할 수 있다. 향후 미래 어떠한 시나리오에 있어서도 남북간 증오와 복수심이 팽배해 있는 한 최악의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남북 민간(Grass root)교류는 장려되어야 한다.

---

12) 향후 한반도 상황의 근본적 변화 시에 주변국들과의 갈등은 쉽게 예견할 수 있다. 주변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력이 약한 우리 입장에서, 북한지역의 지분분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변국들의 기도에 대처하는 일은 북한주민의 마음을 사두는 일이고 가급적 여러 형태로 남북한간 개입(Engagement)의 끈을 갖추는 일이다. 또한 북한과 관련된 문제라면 가능한 범위에서 국제문제화 하지 않고 민족내부문제화 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 4. 최근 남북관계 잇슈 독해법(讀解法)

최근 남북관계나 한반도 현안의 중심 이슈는 김정일 후계문제, 북 핵문제와 6자회담, 그리고 천안함 사건 출구문제로 요약할 수 있겠다. 이슈별로 사건 Detail에 끌려다지지 않고 Big Picture틀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 가. 당대표자회의 결산, 김정은에의 스포트라이트를 치워보면?

청년 “김대장”에 언론의 조명이 집중되고 있지만, “김대장”에게 권력이 넘어간 것으로 보기에선 성급하거나 미흡하다. “김대장”이 중요당직을 맡기는 했지만, 총비서로 당권을 물려받지도 않았고 앞으로 물려받기로 결정된 바도 없다.

후계문제에 대한 김정일의 의도는 분명해 보이지만 그것만으로 권력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김대장”은 중앙무대에 선을 보인 정치신인이다. 김정일 아들이라는 점과 소위 “김심(金心)”이 실려있기 때문에 주목받지 않을 수는 없으나 실제로 권력승계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은 세자(世子) 자리가 아니며 “김대장”은 이 직위를 이용해 권력기반도 다지며 업적을 쌓아 나가야 한다. 주체사상의 핵심인 수령론은 유전자를 논하는 생물학이 아니라 혁명전통을 중심에 둔 정치학이다. 지도자로서 역량과 정치기반을 확보해야 승계의 명분이 주어질 것이다. 그 과정이 여러 요인에 의해 순탄할 수도 있고 험난할 수도 있다.

현시점에서 우리가 김정은 권력체제가 확정되거나 확정되기로 예

정된 것으로 보고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이상을 전망하기에 북한내부 상황에 대해 알려진 것이 너무 적고 변수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 “김대장”에게 쏠린 스포트라이트를 치우고 노동당 대표자대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돌아보자.

객관적으로 들 수 있는 당대표자대회의의 의의는 우선 30년간 열지 않았던 당최고지도기관이 소집되어 결원이 있어도 보임하지 않던 중요한 당직이 채워진 사실이다. 북한은 중국이나 과거 공산 국가처럼 노동당 일당독재와 정부에 대한 당의 지도원칙을 유지하는 사회이다. 당최고지도기관은 당대회 또는 당대표자대회(임시 당대회)이며, 당 대회사이의 기간에는 당중앙위원회가 대신하도록 되어있다. 당중앙위원회도 1년에 두 번 소집되기 때문에 평시에는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최고지도기관의 역할을 하도록 되어있다.

원래 정치국 상무위에는 5명의 위원이 있었으나 그간 김정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망해 10년 이상 김정일 혼자 남았었다. 이번에 빈자리를 메꾸어 “5인 위원회”의 모습을 되찾았다. 또한 절반이 결원이던 당중앙위원회 비서들도 거의 충원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김정일 1인 상무위원 체제아래서 당의 공식적인 계선조직보다 김정일 서기실이 호가호위(狐假虎威) 했었다라든가, 손발도 없는 국방위원회에 가려서 “당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제 당의 주요 빈자리가 모두 충원됨으로써 당 운영 측면에서 새 면모(당 기능의 정상화)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번 당인사에서 중앙당 요직에 진출한 지방당 간부의 현장경험이 정책의 현실성과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북한과 한반도의 장래와 관련하여 매우 중대 시기이다. 이런 때에 노동당이 결원을 충원하고 새로운 진용을 갖춘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고 본다. “김대장”이 대권을 확보할 때까지 얼

마의 시간이 더 필요할지 모르겠으나, 당장 김정일 위원장에게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새로 구성된 당중앙위 정치국 상무위가 당의 최고지도기관이자 국가의 영도기구로서 권력의 공백상태는 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셈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공식 권력승계 목표를 2012년(주체 100년)으로 상정하고 있다면, 2012년은 공교롭게도 한국,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한반도 문제 관련국에서 동시에 리더십 교체가 예정되어 있는 해가 된다.

#### 나. 북한핵문제,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북핵문제가 중대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그러나 뉴스에 핵문제가 나오면 답답해지려 한다. 풀릴 듯하다가 꼬이는 일이 반복되면서 지쳤다고 할까, 짜증난다고 할까. 그런 심정이 되어간다.

핵문제와 관련하여 과거 어떤 합의가 있었고 그것이 이행되지 못한 배경은 무엇인지 하는 이야기들은 너무 복잡해 전문가들도 헷갈릴 지경이다. 새 소식만 전하는 뉴스 앞에서 옛 시비를 잊어버린 독자에게 이 문제는 골치 아플 뿐이다. 필자도 이를 반복할 생각은 없다. 다만 북핵문제가 중대국면(기회)에 들어섰다는 점을 확인해 보고 싶을 뿐이다.

히로시마 이후 인류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해 끈질긴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미국과 소련 중심의 냉전은 이를 이상주의자들의 비현실적인 꿈으로 만들어 버렸다. 다행히 20세기의 마지막 10년, 탈냉전을 배경으로 미국과 소련 사이에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실천적 합의가 이루어진다. 인류사에 값진 합의들이다.

1986년 고르바초프는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자고 제의하고, 이를 레이건이 수용한다. 그러한 제안은 미국의 “별들의 전쟁”(SDI)에 대한 대응이라는 것이 대개의 해석이지만, 여하튼 “전략무기감축협상”(START)을 시작한다. 실제로 1992년까지 해외배치 중거리 핵무기를 모두 폐기 또는 철수시킨다. 한반도 핵무기도 철수하고, 이를 배경으로 남북한은 “비핵화공동선언”에 서명한다. 전략 무기 감축도 성과를 거둔다. 미국과 소련(러시아)은 1단계와 2단계 START에 합의하고 핵무기 폐기를 실천해 나간다. 1995년에는 “핵확산방지조약”(NPT)도 무기 연장되고 다음해에는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도 체결된다. 20세기 마지막 10년은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해 보기 드물게 평화를 실천하는 “착한” 시대였다. 두 번의 대전으로 1억 이상 전사자를 낸 20세기에 그나마 위안이 되는 시기로.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든다는 이상주의자들의 꿈이 실천되는 시대였다.

아쉽게도 이러한 흐름은 21세기에 들어와 중단된다. 2001년의 911테러는 미국의 핵정책을 크게 바꾸어 버린다. "불량국가"들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처하여 미국은 "미사일 방어체계"(MD)를 수립하기로 하고 러시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요격미사일제한협정”(ABM)에서 탈퇴를 선언한다. 이를 구실로 START의 이행이 중단되고, 미국의회는 CTBT 비준도 거부한다. 미국은 불량국가로 분류된 국가들에게 핵무기를 선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백히 한다. NPT 정신에 대한 중대 도전이었지만 테러와의 전쟁 중에 어느 국가도 신경을 쓰지 못했다. 이 와중에 핵태세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과 핵개발을 추진하는 북한과의 핵협상은 인류 비핵화 노력에 비추어 보면 공허해 보였다.

그러나 21세기 첫 10년을 테러와의 전쟁으로 어수선하게 시행착오를 겪어온 미국이 최근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드는 노력에 다

시 출선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별스런 업적도 아직은 없는 오바마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것에 말이 많았지만, 그가 “유일하게 핵무기를 사용한 미국은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만드는데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말한 것만으로도 평가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북핵문제가 새삼스러운 주목을 받는다. 북한도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과 세계사 흐름을 자세히 분석하고 있을 것이다. 어렵게 되살아난 핵무기 없는 세계에 대한 인류의 기대를 잘 살펴야 한다. 북한은 NPT에서 탈퇴를 선언한 유일한 나라이고, 21세기 들어와 핵실험을 한 유일한 나라이다.<sup>13)</sup>

북한의 핵무기개발 의도는 분명하다. 핵강국에 포위된 형편에서 인도, 브라질, 남아공처럼 지역 패권을 추구할 수는 없다. 그들의 표현대로 “조미 사이의 평화관계”가 이루어지면 비핵화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은 나름의 계산 결과라고 생각한다. 북한의 계산, 즉 비핵화의 대가 또는 조건이 “평화”라면, 이는 한반도에서 현재 진행 중인 전쟁을 끝내고(정전협정은 아직 전쟁 중이라는 뜻이다) 평화를 수립하자는 것이며, 북한의 입장에서는 “체제보장”과 같은 말일 것이다. 우리 관점에서 보면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체제아래에서 남북간 기본관계를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문제로 된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문제는 동시에 타결을 볼 가능성이 높아졌다.

북한의 핵포기 결단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후자는 우리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문제다. 북미간 타협에 맡기고 기다릴 문제가 아니다. 남북이 평화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되어야 핵문제도 풀 수 있다고 본다.

---

13) 1945년부터 1999년까지 전세계 7개국이 2,054회의 핵실험을 했다. 평균 9.6일에 한번 꼴로 한 셈이고 그중 절반이상이 미국의 실험이다. 그러나 CTBT가 발효되면서 핵실험은 중단된다. 21세기 들어 오로지 북한이 2차례 시행했다. 북한 핵문제의 심각성이 여기도 들어난다.

#### 다. 천안함 젊은 영혼들이 말하는 진실?

당면한 한국의 외교, 안보, 남북관계를 이야기 할 때 우리는 여전히 천안함 사건을 어떻게든지 정리하고 나서야 풀어나갈 수 있는 상태다. 천안함 사건을 없었던 것처럼 괄호 안에 묶어두고 외교, 안보, 통일정책을 언급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아직도 정부는 대증(對症) 조치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고민 속에 있고, 항간에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 발표 내용에 대한 기술적 의문과 의혹이 끊임없이 흘러 다니고 있지만, 이런 고민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문제에서 찾아야 할 핵심적 교훈과 본질적 과제로 최소한 두 가지는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여기서 출발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대증적 조치에서의 아쉬운 무엇인가가 여기에서 채워질 수 있다고 본다.

첫째, 북한으로부터 안보위협이 상존한다는 진부한 사실을 새삼 절감하는 것이며, 정부와 우리 군은 언제나 신뢰할 만한 위기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아직 6.25가 종료된 것이 아니며 남북은 휴전상태에서 대치 중이다. 휴전상태가 길어져서 착각하기 쉽지만 하시라도 전쟁이 속개될 수 있는 상태에 있다.

둘째, 이러한 불안정한 휴전상태를 종식시킬 때라는 각성이다. 지난날 남북관계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휴전상태라는 불안정한 평화에 의지한 것이었으며, 언제까지 이렇게 불안정한 가짜 평화에 의존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이제 6.25전쟁 60년을 보내면서 길고도 지루한 전쟁을 끝내야 하지 않느냐고 천안함은 묻고 있다. 그 대답으로 한반도 미래 전략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우리를 지지하던 않던 천안함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은 변함없다. 합조단 발표에 대하여 기술적 의문과 정치적 의혹이 어떠한 천안함 사건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근본 과제는 역시 분명하다. 이 사건은 친북과 반북을 구분하는 잣대도 아니며 이념문제로 해석할 것은 더더구나 아니다. 친북이나 진보 입장에서든 북한의 위협이 상존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으며, 반북이나 보수 입장에서든 불안정한 평화를 이제는 종식시키자는 요구에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천안함 사건의 마무리는 대응조치가 아니라 근본조치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국가 위기관리의 문제와 한반도의 미래전략과 관련된 문제 두 가지로 요약될 것이다. //끝